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이목 집중

교육부 "시·도 교육청 내일까지 결과 보고 받아 강력조치 여부 결정계획"

전교조 탄압 저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단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 위원장단은 부당해고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퇴출제 저지 등을 위해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3차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사자들이 3월 30일 1차 회의에 이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심의를 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교육부는 20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당 교육청을 감사하겠다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결과 보고를 받아 검토한 이후 강력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교육감 대다수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속속 밟아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노조 전임자가 복직한 인천·세종·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 미복직 전교조 교사는 총 35명이다.

이 중 대구, 경북, 울산, 대전 등 보수교육감 지역의 전교조 전임자 5명과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 사립학원 교원 1명이 지난달 직권면직 됐다.

나머지 29명 중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 9명(사립교원 3명), 경기 4명, 부산 2명, 충남 2명, 충북 2명 중 1명 등 18명의 전교조 전임자가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된 상태다.

따라서 전북을 포함한 충북(1명)과 전남(3명)은 19일 징계위를 거칠 예정이다. 나머지 충남, 충북, 광주, 강원, 경남 등 8개 교육청 교육감들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보수교육감에 이어 진보교육감들도 직권 면직 절차에 가세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마저 징계 절차에 가세한 이유는 지난 1월 고등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면서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지는 등 법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전교조전북지부가 직권면직 절차 중단을 위해 농성을 예고했다.

전교조전북지부 관계자는 "18일 오후 6시부터 부당해고를 저지하고 전임휴직을 인정을 요구하는 '전북교육주체결의대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임자 3명과 수석부지부장의 삭발투쟁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새만금지방환경청, 정읍산단 화학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은 18일 정읍신업단지 소재 LS엠트론(주)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관계기관과 사업장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정읍그룹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주관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7개 기관 정읍지역자율방제단 등 5개 사업장 50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날 LS엠트론(주) 정읍공장의 동박공정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지붕구조물이 붕괴되고 실외저장시설 파손으로 황산이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사고상황 신고·전파 △인명구조 및 주민대피 △사고지역 오염도 분석 및 방제활동 △오염지역 제독 및 폐기물 수거·처리 등 4단계로 구분해 실시됐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9년 연속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전북대학교가 9년 연속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고 입학사정관 확충 등 대입전형 운영 역량을 강화하며 고른 기회전형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 경감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 및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대면평가를 실시해 이 가운데 60개 대학을 최종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에 전북대는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6억8,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고교교육 중심 대입전형의 내실화와 대학-고교 연계 활동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전북대는 그동안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운영해왔고, 입학 전형에 가장 중요 요소로 꼽히는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형을 개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전임 입학사정관을 비롯한 교수입학사정관, 위촉 입학사정관 등 폭넓은 인력풀을 구축해 다수·다단계 평가를 진행해 온 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지난 입시에서도 학생부 영향력 강화, 고교-대학 연계 강화, 고른기회 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 강화 등 실질적인 공교육 정상화 개선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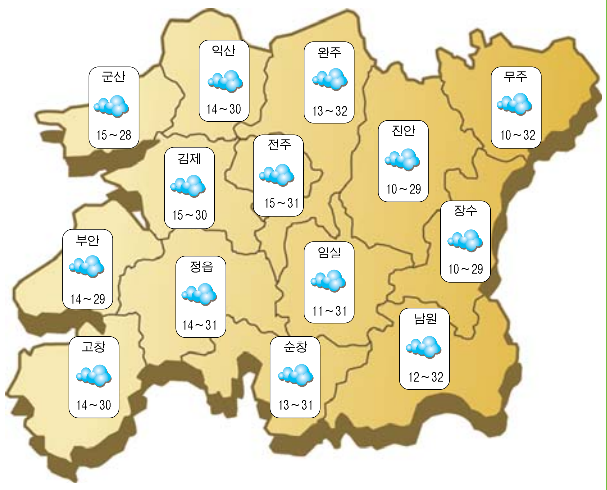
최영준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전북대가 9년 연속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를 넘어 대입 전형 선진화에 앞장서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5월 19일 목요일 해뜸 05:24 | 해짐 19:35 달뜸 19:33 | 달짐 03:58

날 씨 최저기온 11~16도 최고기온 30~32도



"주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를"

남관우 전주시의원 "신호위반 인한 교통사고 줄일 수 있어"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 도입을 주문했다.

남관우 시의원(진북,금암1·2동)은 18일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행신호등에 이어 주행신호등에도 잔여시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국내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4.2%를 차지하며, 발생 건수에 비해 사망자의 수가 월등히 높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와 함께 치사율이 높은 사고로 분류된다.

남 의원은"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주행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뀔 때 많은 운전자들이 그대로 지나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고, 출퇴근시간 차량 꼬리물기로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교차로 등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딜레마 존'이 길어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딜레마 존'은 운전자가 진행신호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진행하다가 정지신호가 켜졌을 때 서야 할지, 진행해야 할지 갈등하게 되는 구간을 말한다. 차량의 속도가 빠르거나 황색 시간이 길수록 운전자의 결단력이 늦어져 딜레마 존도 길어져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남 의원은 이같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대책으로 "차량 주행 신호등에 잔여시간을 표시기를 부착하면 운전자가 주행 잔여 시간을 사전에 인지해 정지 또는 주행 사이의 딜레마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보건소 등 농촌 지역 원격의료 시범 추진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는 병원이 없다. 이곳 주민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2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여객선을 1시간 동안 타고 완도 읍내로 가야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이에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해 농촌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 홍성 등 창조마을 사업자 5개소에서 의자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된다.

전남 완도 등 농협의 '행복모음센터'에서도 원격 의료 모델이 시범 도입된다.

/박용주기자